

[세미나]

사회인식조사의 결과와 시사점

- 일시: 2021년 10월 29일 (금) 오후 2시
- 장소: 산림비전센터 7층 열림홀
- 주최: 자유기업원

사회: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발표: 황승연 경희대학교 교수

토론: 김주성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학술정책부원장
황상현 상명대학교 교수

대선 6개월 전 국민의식과 가치관 조사: 정권교체의 열망과 분노의 실체

황승연 경희대학교 교수

〈사회인식조사의 결과와 시사점〉 자유기업원 세미나 발제 자료

대선 6개월 전 국민의식과 가치관 조사

2021. 10. 29

황 승 연
(경희대학교 교수)

1. 조사 개요

Prepared for : 차미연, 자생넷, 굿소사이어티

조사대상 및 표본크기	•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12명 (주의: 통계 보정으로 2,000표본으로 분석하였으며, 보도/공표 시에는 조사 실 사례수 2012명으로 기재해야 함)
표본추출	• 리서치앤리서치 패널 (2021년 7월 기준 약 14만명) (온라인 회원가입 등의 방법으로 자체 구축한 리서치 패널)
표본추출방법	• 성/연령/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 추출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인터넷(웹) 조사
통계보정	•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 (참가중, 2021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응답률 및 표본오차	• 35.8% 95% 신뢰수준에 $\pm 2.19\%p$
조사기간	• 2021년 8월 15일 12시~23시 59분 • 2021년 8월 16일 00시~23시 59분 • 2021년 8월 17일 00시~23시 59분 • 2021년 8월 18일 00시~23시 59분 • 2021년 8월 19일 00시~15시 00분
조사기관	• ㈜리서치앤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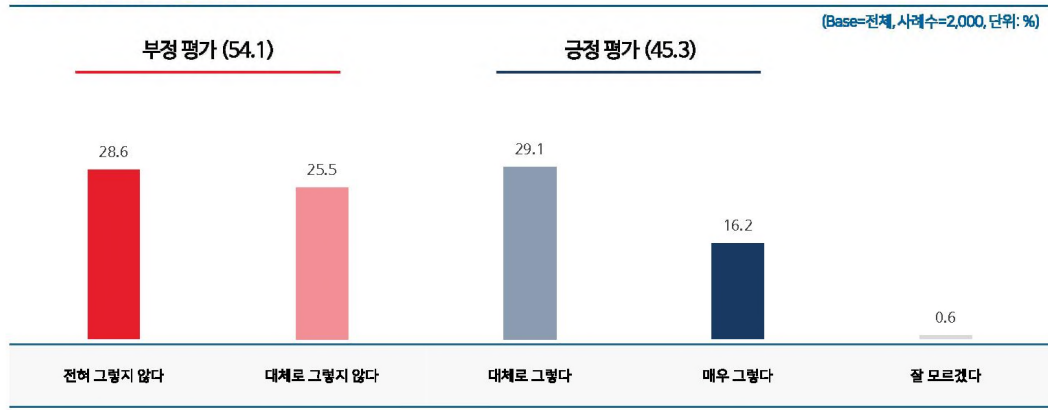
2. 조사결과

1. 국정운영 평가

1) 8월 국정운영 긍정·부정 평가

- ▶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45.3%(매우 그렇다 16.2% + 대체로 그렇다 29.1%), 부정 평가는 54.1%(전혀 그렇지 않다 28.6% + 대체로 그렇지 않다 25.5%)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8.8%p 높게 나타남
- ▶ 강한 긍정이 강한 부정보다 12.4%p 적게 나타남. 중립에 표한 응답자가 극히 적음. 작년은 53.3 : 44.6이었음
- ▶ 국민들의 정권교체 열망과 높은 상관관계 보임.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긍정·부정 비율



대선 6개월 전 국민인식과 가치관 조사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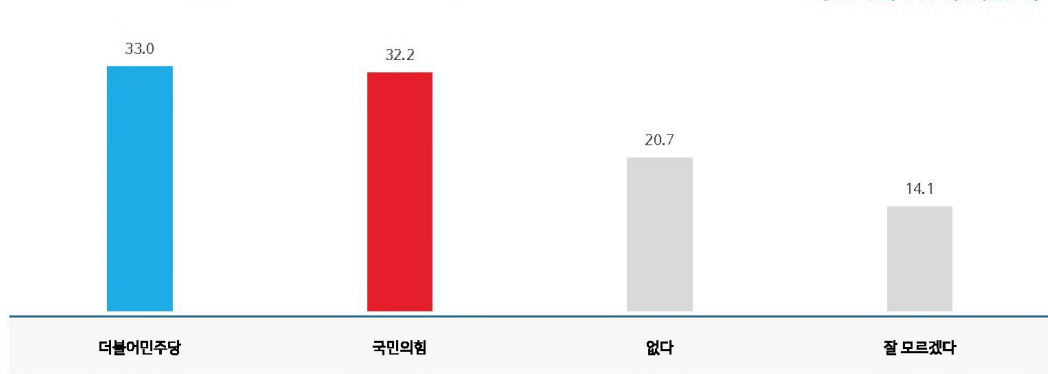
2. 조사결과

4. 미래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정당

더불어민주당 vs. 국민의힘

- 미래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당으로는 더불어민주당(33.0%)과 국민의힘(32.2%)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한편, 없다 20.7%, 잘 모르겠다 14.1%임
- 조사 중간 집계 때 31.7 : 31.8 : 22.7 : 13.8 (+1.3, +0.4, -2.0, +0.3)에서 변했는데 민주당 지지도가 더 높아졌음.
- 군소정당을 제외했을 경우 국민의당 지지자들은 41.4%가 국민의힘을 9.2%가 민주당을 지지함. 정의당 지지자도 24.1%가 국민의힘을 13%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음. 정의당의 민주당 불신이 상당함

(Base=전체, 사례수=2,000, 단위: %)



대선 6개월 전 국민인식과 가치관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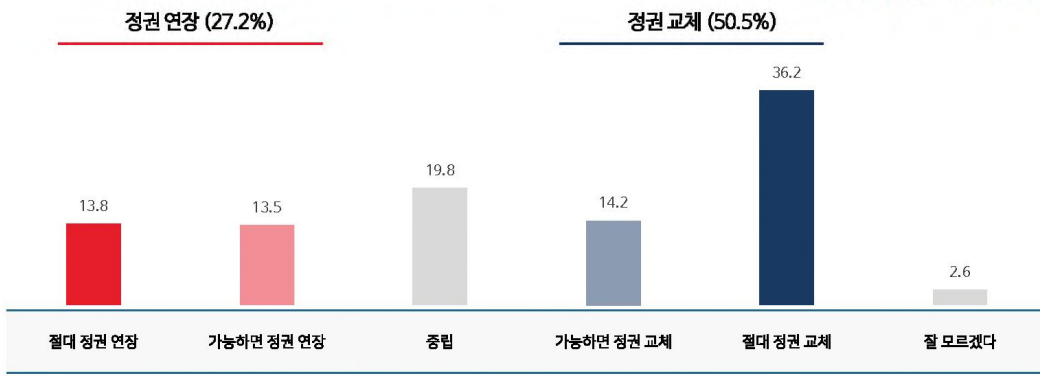
4

2. 조사 결과

3. 정권교체 열망

- 차기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50.5%로 정권이 연장 되어야 한다 27.2% 보다 크게 높게 나타남
- 절대정권교체가 절대정권연장과 비교하여 월등하게 높음. 무당층도 정권교체를 더 원함. 그런데 왜 윤석열 지지가 이재명보다 낮은가? 정권 교체열망을 가진 50.5% 중 42%는 윤석열을 지지하고 14.2%는 이재명을 지지함. 정권연장을 바라는 27.2% 중 71.7%는 이재명을 지지하고 단 2.6%만 윤석열을 지지함. 정권교체를 원하는 국민들 중 3명이 윤석열을 지지할 때 1명은 이재명을 지지함. 이재명이 당선되는 것도 정권교체라고 받아들이는 국민들 때문에 정권교체 열망이 높는데도 이재명 지지자가 윤석열 지지자보다 높은 원인이 됨. 연령적으로 4050에서 정권연장에 대한 의견이, 60대 이상에서 강한 정권교체열망.
- 조사 중간 보다 정권연장은 0.7 높아졌고 정권교체는 0.6 낮아졌다.

(Base=전체, 사례수=2,000, 단위: %)



대선 6개월 전 국민의식과 가치관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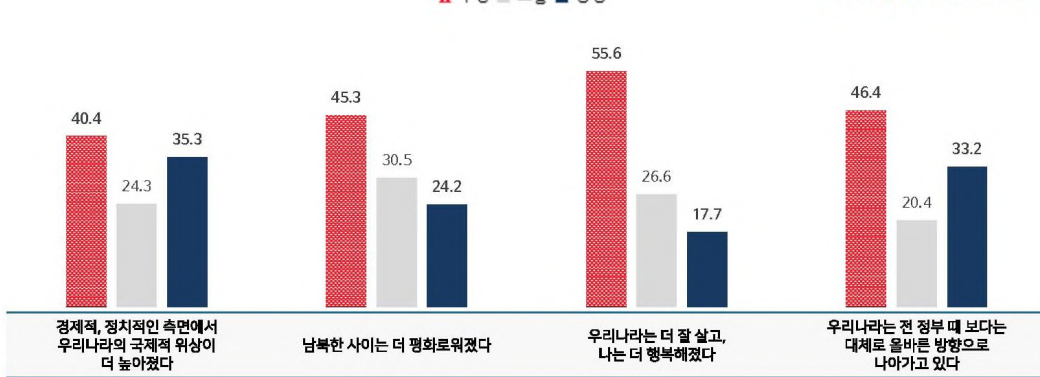
5

7.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평가

-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즉 박근혜정부 때와 비교하였을 경우에 현재 상황에 대하여 물었을 경우, 전체적으로 현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여기고 있고, 이 정부가 강조하는 **행복지수가 크게 낮아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제적 위상이 낮아졌고, 남북한 사이는 더 위험해졌다고 느끼고 있고 전체적으로 박근혜정부보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더 잘살고 자신은 더 행복해졌다는 질문에 긍정의 답변은 17.7%인 반면 부정의 답변을 55.6%로 압도적인 차이로 불만족을 나타내고 있다.

부정 보통 긍정

(Base=전체, 사례수=2,0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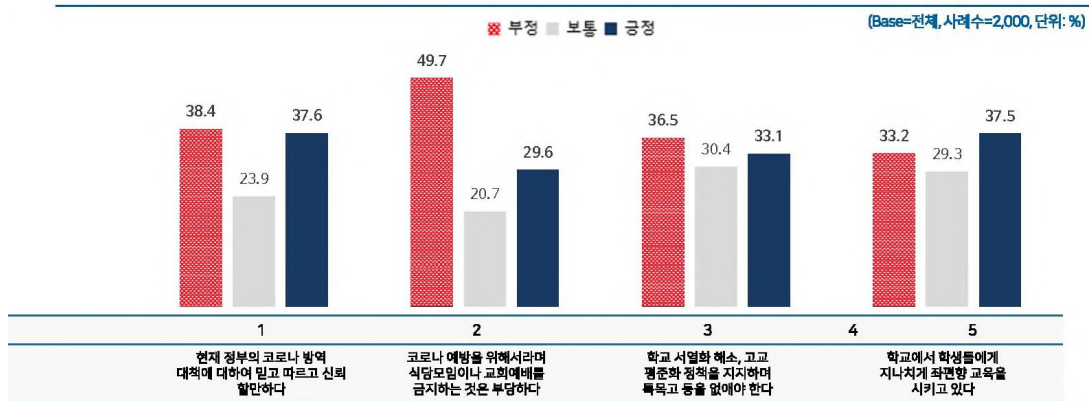
대선 6개월 전 국민의식과 가치관 조사

6

2. 조사결과

8.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 현정부의 코로나 방역대책에 관하여 신뢰와 불신의 정도가 비슷함. 이는 정권교체열망과 높은 상관도(0.58)를 보임. 즉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은 방역대책에 불신을, 정권연장을 바라는 국민들은 신뢰를 보이고 있다. 거리두기 정책에 대해 정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는 국민들이 49.7:29.6으로 더 많았다. 이에 대한 정권교체열망과의 상관도(0.28)는 일반적인 방역정책 신뢰(0.58)보다는 떨어짐.
- 특목고 폐지에 반대가 약간 높고(36.5:33.1), 좌편향교육에 대해서 37.5%가 인정하고 있고 33.2%는 인정하고 있지 않음. 이 두 질문에 대한 응답 모두 정권교체 열망과 0.433과 0.563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정권교체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좌편향교육을 훨씬 더 걱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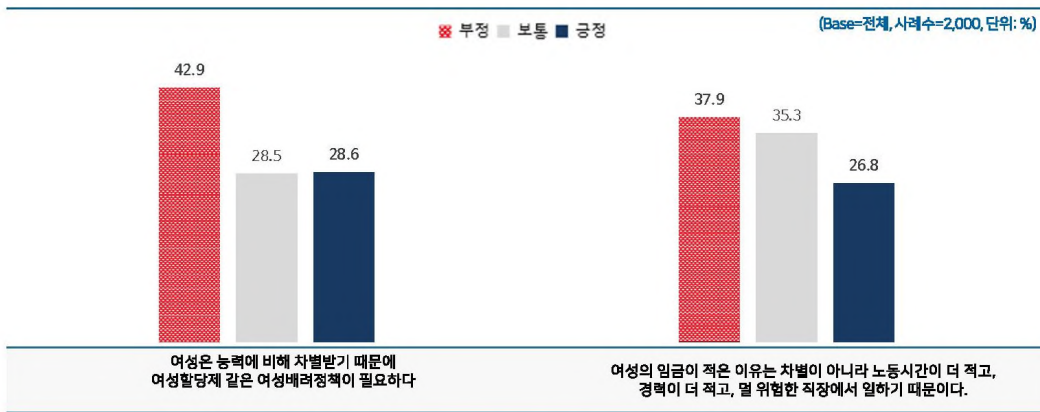
대선 6개월 전 국민의식과 가치관 조사

7

2. 조사결과

8. 여성정책 페미니즘과 관한 인식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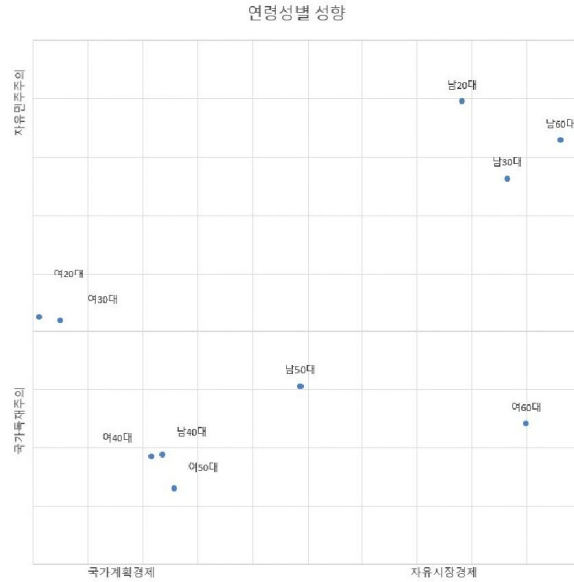
- 여성 배려정책과 여성 임금에 대하여 공정성이 좀 더 중요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지만 **성별 상관관계(0.19)는 크지 않고 문재인 지지도(0.2)와 정권교체 열망(0.16)과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 단, 2030에서만 남녀 성별의 차이가 크다. 임금의 차이에 대해서는 성별과 상관관계는 0.29인데 2030성별의 상관관계는 여성 임금에서 0.438, 여성할당제에서 0.382의 관계를 보였다. 다른 연령의 차이는 연령이 높을 수록 성별에서 차이가 적어진다. 2030에서는 여성이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정권교체 열망과는 상관관계가 낮다(0.150과 0.158).



대선 6개월 전 국민의식과 가치관 조사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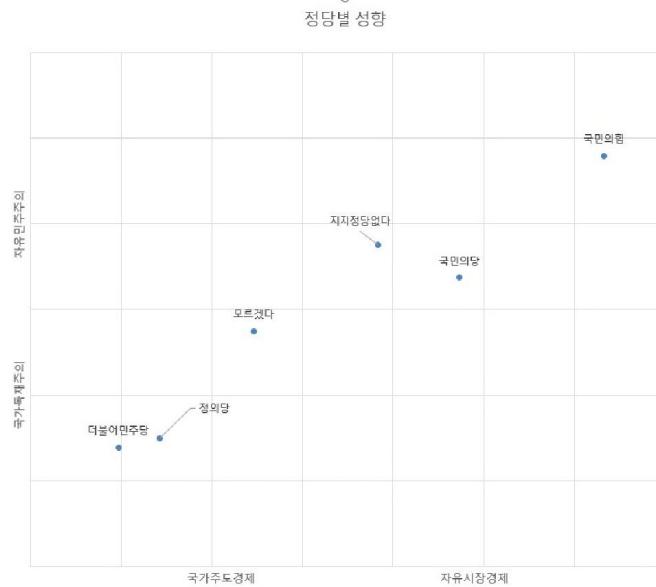
연령 X 성별 성향(정치적, 경제적 상대적인 positioning)



대선 6개월 전 국민의식과 가치관 조사

9

정당별 성향(정치적, 경제적 상대적인 positio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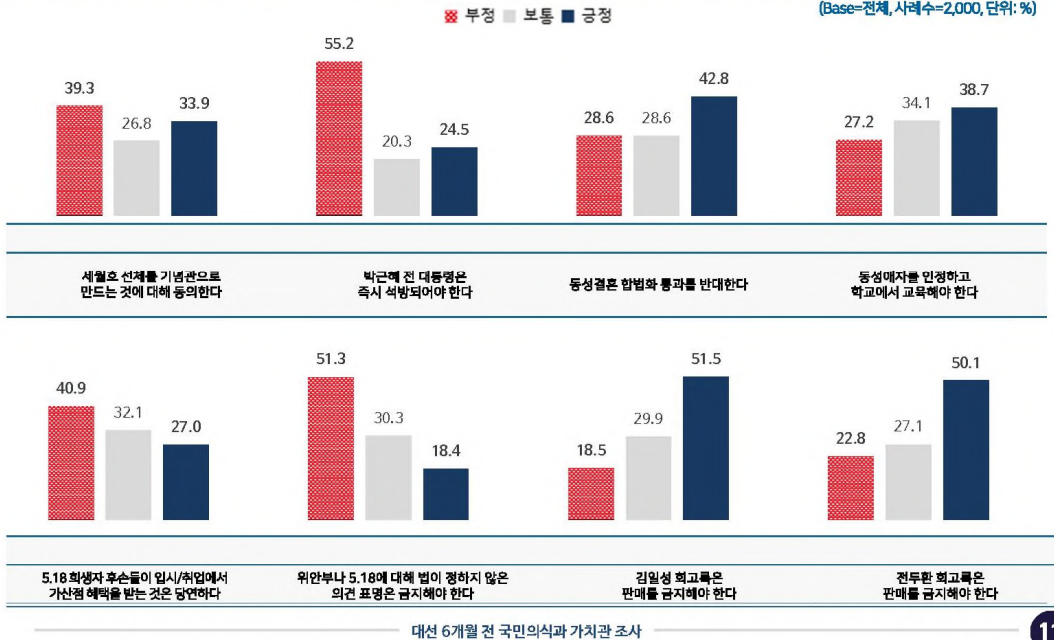


대선 6개월 전 국민의식과 가치관 조사

10

8.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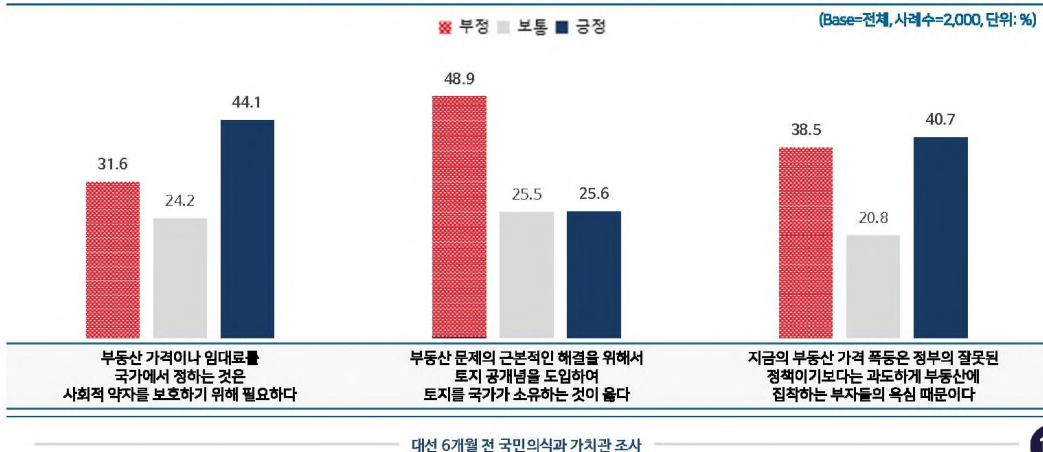
세월호 기년관에 대해 문제인지지도와 정권교체 열망과 0.47, 0.48의 상관관계, 문제인지지도에 대한 상징적 의미



11

9. 부동산에 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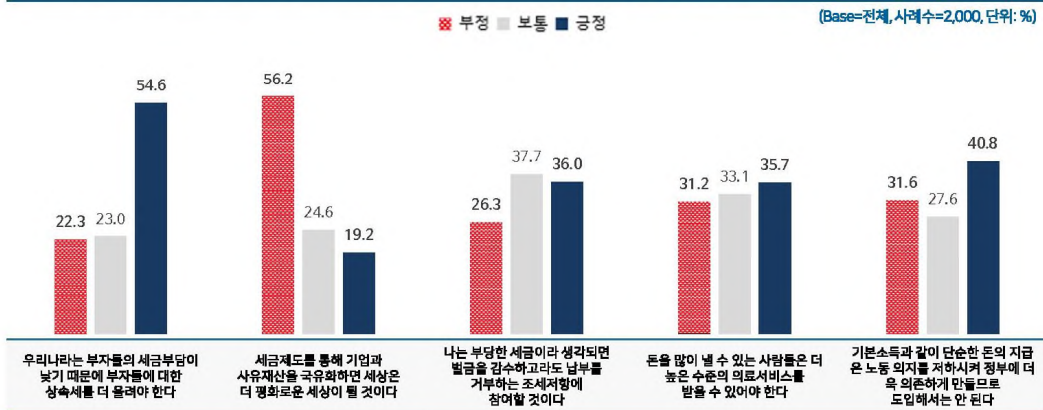
- 부동산에 대한 각 의견 평가에서 '부동산 가격이나 임대료를 국가에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44.1 : 31.6으로 찬성이 많고, '지금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기보다는 과도하게 부동산에 집착하는 부자들의 욕심 때문이다'는 질문에도 40.7 : 38.5로 긍정이 약간 높았다. 반면,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여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는 것이 옳다'는 질문에 대한 의견은 반대가 48.9: 25.6으로 2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 체제 관련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우파적이지만, 개인의 당면한 문제에 개인의 이익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좌파적이다. 책임을 부자들 탓으로 돌리는 구성을 가진 사람들이 40%나 되며 문제인 지지도와 상관도가 높고 정권교체 열망과는 0.49의 상관관계



12

9. 세금에 관한 의견

- 세금에 대한 각 의견 평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에 대해 '부자들에게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54.6%로 높게 나타난 반면, '세금제도를 통해 기업과 사유재산을 국유화하면 세상은 더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19.2%)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낮게 나타남. **역시 체제에 관한 질문에는 우파적으로, 부자에 대한 시기심과 개인의 이익에 관한 질문에는 좌파적으로 답함. 203060 남성이 우파적이고 2030여성, 50대, 호남에서 더 좌파적임.**
- 부자들에게 대한 상속세 질문에는 작년 14.9 : 64.8에서 현재 22.3 : 54.6으로 **차이가 줄어들**
- 기본소득에 관한 질문에도 작년 24.9 : 44.3에서 현재 31.6 : 40.8로 **차이가 줄어들. 1년 사이에 보수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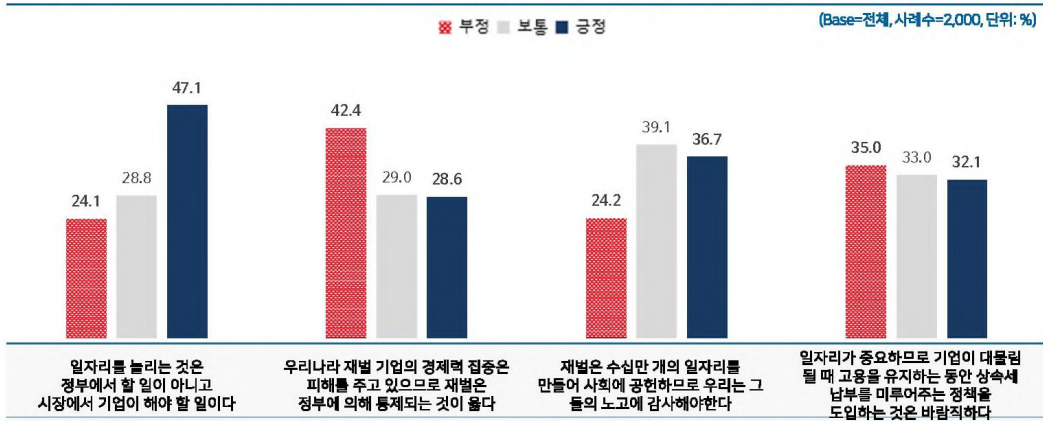


대선 6개월 전 국민의식과 가치관 조사

13

9. 고용과 기업에 관한 의견

- 기업에 대한 각 의견 평가에서 '일자리는 시장에서 기업이 해야 할 일이다'는 의견이 47.1%로 2배 정도 높게 나타남. 재벌기업은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 옳다'는 의견에 반대가 많고 재벌의 사회적 공헌을 인정해야한다는 의견이 더 많다. 일자리와 연계하여 선진국가들과 같은 기업상속제도에 반대 의견이 35%로 찬성 의견 32.1%보다 높았다. 민주당의 공무원 숫자와 일자리 확대정책 그리고 무상복지 확대정책에는 42.9:28.6으로 반대가 많다.
- 시장과 기업 그리고 재벌에 대한 긍정적인 평, 친기업적 정서가 우세하다. 2030남성들은 더 친기업적이고 여성들은 반기업적인 성향임. 1년 전 조사와 비교하여 고용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부정적인 태도가 크게 늘었다. **전체적으로 보수화 진행됨**



대선 6개월 전 국민의식과 가치관 조사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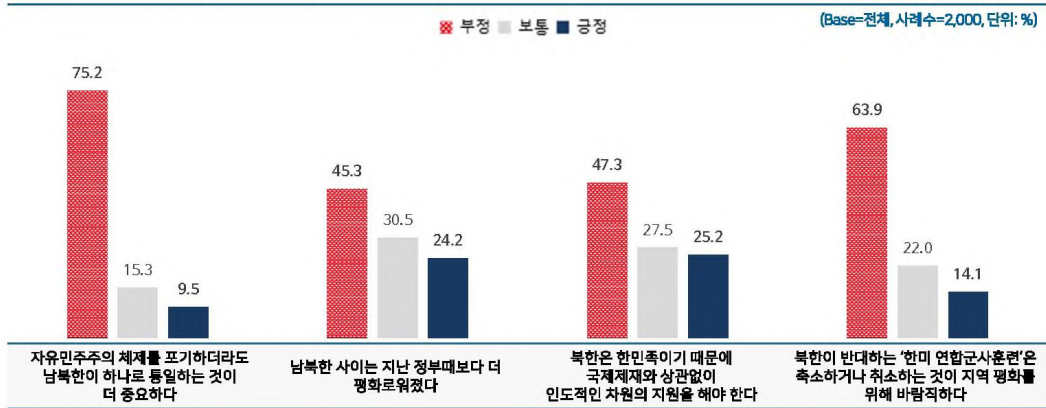
-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안보에서 뿐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우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개인의 당면한 이익 앞에서는 이기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또 ‘재벌 제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있지만, 부자 개인들에 대한 시기심이 높고, 부자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혹은 부자를 끌어내리려는 미성숙한 심성 또한 상당히 확산되어 있다’. 이는 정부와 집권당이 ‘사회 불평등 문제의 원인으로 부자들에게 돌리고, 부자들의 일탈행위를 과도하게 과장 보도함으로써 증오를 확산시켜, 사회의 모순들이 정책을 잘못이라기 보다는 부자들 탓이라는 선동을 지속적 으로 해온 것의 결과라고 보여진다’. 우리 사회가 건전한 시장경제 체제가 흔들림없이 자리잡기 위해 성숙한 자유시민의 소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조사였다.

대선 6개월 전 국민의식과 가치관 조사

15

10. 체제 문제와 북한 및 국제관계에 대한 태도

- 북한에 대하여 그리고 안보에 대하여 대단히 보수적인 태도를 보인다.
- 자유민주주의 체제보다 통일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에는 75.2%의 압도적인 반대를 보인다. 체제에 대한 문제에 60대 이상에서 조금 더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안보에는 성별, 연령, 지역에 큰 차이가 없다. 정권교체 열망과도 큰 관계가 없다.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축소나 취소에도 압도적인 차이로 반대하고 있다. 체제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만큼이나 한미동맹의 중요성도 중시하고 있다.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서도 47.3%가 반대하고 있고 25.2%만 동의하고 있다. 지난 정부때보다 남북한 사이가 더 평화로워졌다는 질문에 45.3%가 반대의견을 나타냈고 24.2%만 긍정을 표했다. 이 질문은 정권교체열망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비판적인 국민들이 남북한 사이의 위장평화를 직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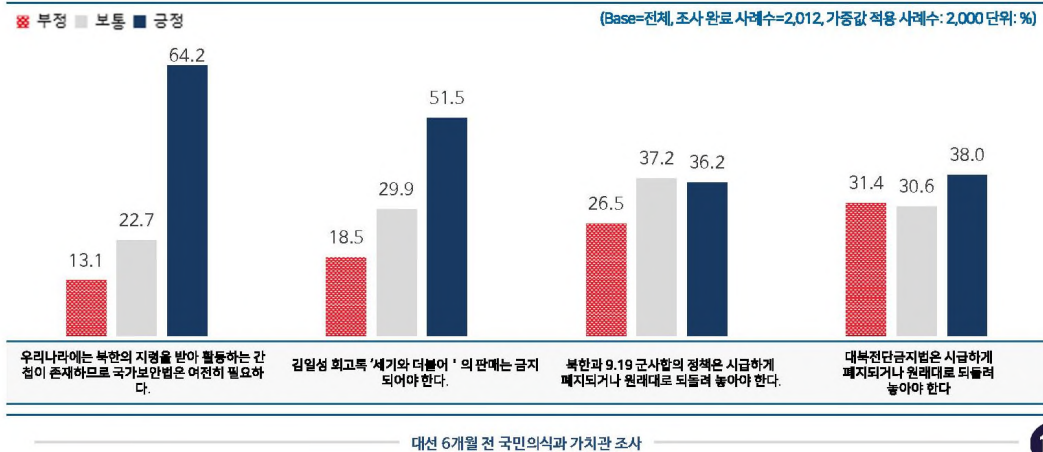


대선 6개월 전 국민의식과 가치관 조사

16

10. 북한관련 질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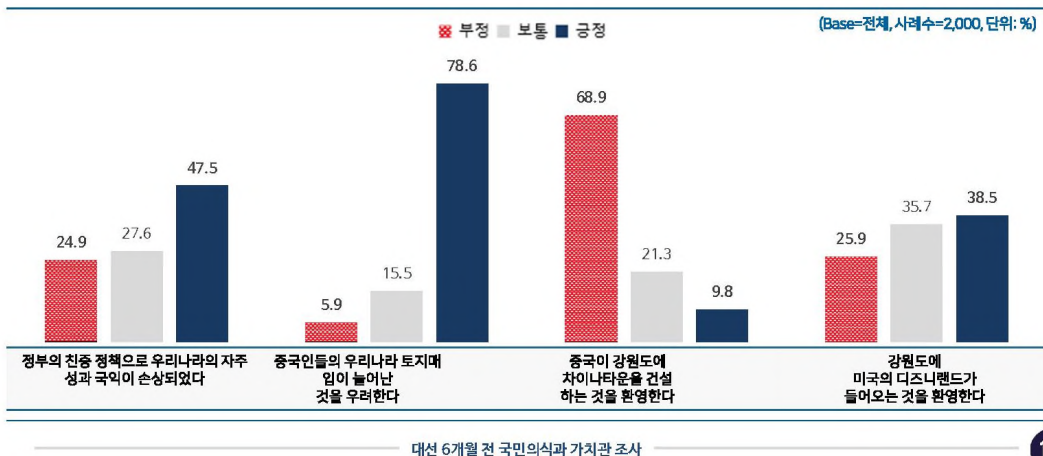
-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태도에 지역적 차이와 성별의 차이는 없고 60대 이상에서 약간 높은 정도이다. 전국민이 평균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김일성회고록의 판매도 금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3배 가량 많았다. 북한과의 9.19 군사합의와 대북전담금지법도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이 두가지 현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정권교체 열망과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17

10. 중국 관련 질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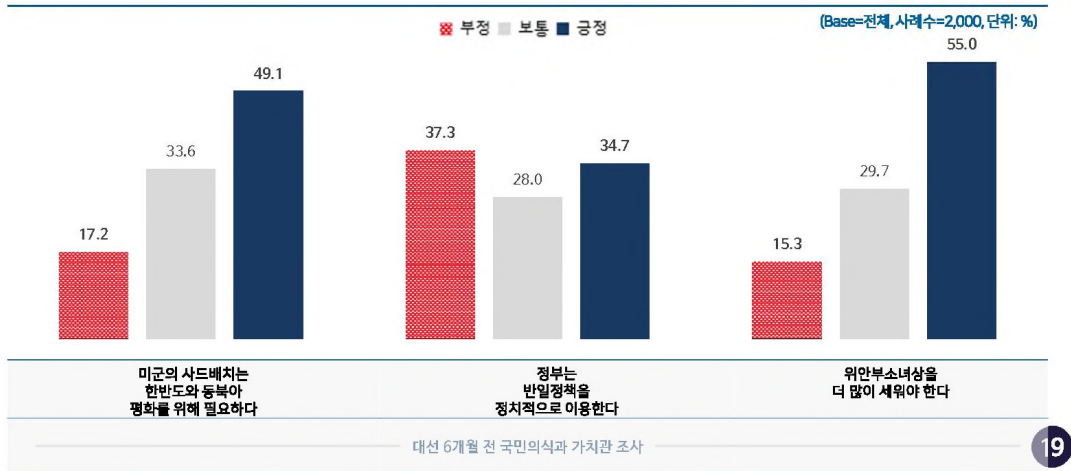
- '중국인들의 우리나라 토지매입이 늘어난 것은 우려할만한 일이다'(78.6%)라는 의견에 대해 압도적인 동의를 보인다. 찬성하는 국민들이 5.9%에 불과하다. 중국인들의 토지매입에 20대와 60대 이상에서 더 반대가 심하다. '강원도에 중국이 차이나타운을 건설하는 것에 환영하느냐'는 질문에 68.9 대 9.8로 반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미국의 디즈니랜드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 반대보다 약 50%가 높았다. 정권교체의 열망과도 무관하게 반중정서가 전국적으로 전 연령층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



18

10. 미국, 일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태도

- 미군의 사드배치에 대해서도 49.1%가 찬성을 17.2%만이 반대의 태도를 갖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한미동맹의 가치에 대해 강한 동의와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
- 한편 위안부소녀상이 더 많이 세워져야 한다는 의견에 무려 55%가 찬성하고 있고 단 15.3%만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성별과 60대 이상을 제외한 연령의 차이는 없고, 지역적으로는 호남과 제주 지역에서 위안부소녀상 건립에 평균이상의 동의를 보인다. 또 '반일정책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한다'는 질문에 동의하는 응답에 34.7% 반대가 37.3%로 비슷했는데, 이는 위안부상을 더 많이 세워야한다는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에서 정부의 반일정책이 성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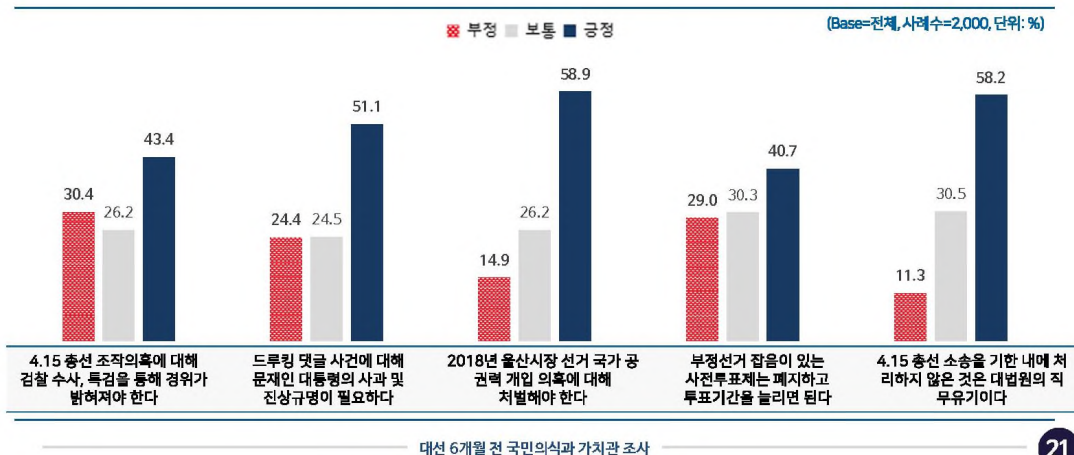
10. 북한과 국제 관계

- “안보 측면에서 우리국민들의 보수적인 성향이 뚜렷하고 이는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반중 정서가 대단히 높고, 여전히 친미 성향을 보인다. 특히 중국의 경제침탈은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정부에서 반일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나친 선동을 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34.7%나 되고 그렇지 않다고 답한 사람들이 37.3%이다. 주창가와 같은 반일에 대한 선동의 결과 맹목적인 반일 감정이 자극되었다고 본다. 1년 전에는 31.8%가 선동을 인정했고 41%가 부정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인정이 늘었고 부정은 다소 줄었다.

20

11. 부정 선거와 관련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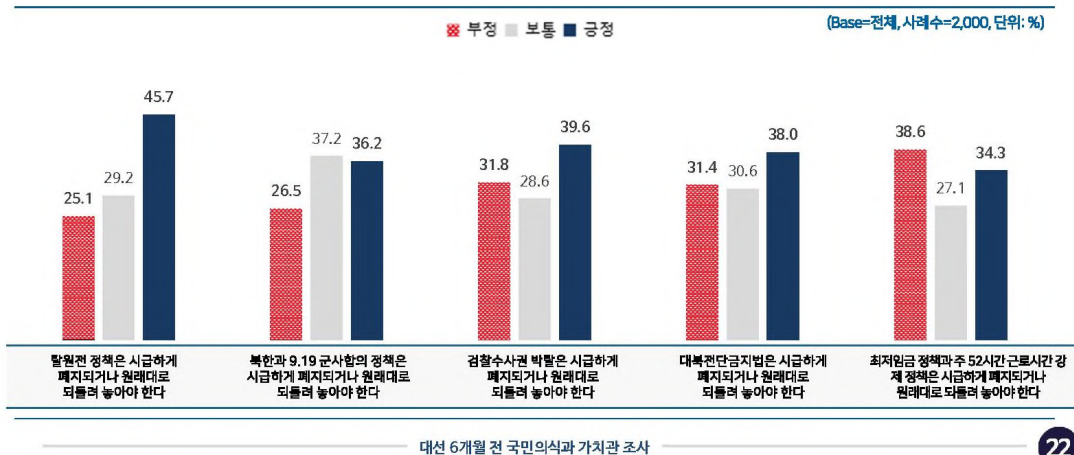
- 선거관련 이슈에 대한 각 의견 평가에서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국가 공권력 개입 의혹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58.9%), '4.15 총선 소송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은 것은 대법원의 직무유기이다'(58.2%)는 의견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한편, '부정선거 잡음이 있는 사전투표제는 폐지하고 투표기간을 늘리면 된다'(40.7%), '4.15 총선 조작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 특검을 통해 경위가 밝혀져야 한다'(43.4%)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낮은 편임
-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에 깊은 불신을 갖고 있으며 특히 **대법원에 대한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깊은 불신을 갖고 있음**



21

13. 악법폐지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의견

-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정책과 관련된 주장 중 '탈원전 정책은 시급하게 폐지되거나 원래대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45.7%)는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검찰수사권 박탈'(39.6%), '대북전단금지법'(38.0%)는 시급하게 폐지되거나 원래대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등으로 반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 최저임금제와 52시간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자신의 이익과 직결되는 측면에서 정책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22